

일제강점기 강릉지역 중등학교 유치 운동과 식민지 교육 배분의 전개 양상*

김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지역의 중등학교 설립 과정을 식민 권력의 억제 정책과 지역민의 주체적 대응 간의 길항으로 규명하였다. 1920년대 초 영동의 거점인 강릉은 관립 고등보통학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총독부의 ‘1도 1고보’ 원칙과 도청 소재지 우선주의에 밀려 좌절되었다. 이후 운동은 사립고등보통학교 추진과 춘천공립농업학교 이전 요구로 분열되었다가, 관 주도의 중재를 거쳐 1928년 3년제 을중 강릉공립농업학교 설립으로 타협되었다. 그러나 을중 농업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제한과 취업상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차별을 낳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청원 끝에 1939년 전시체제기 인력 수요에 힘입어 갑중 학교로 승격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설립비는 향교 재산과 모범장 매각 대금, 무산계급에 대한 호별 각출 등 지역사회의 자부담으로 조달되었다. 결국 강릉의 중등학교 유치는 국가 재정의 지역 전가와 유지집단의 명망 추구 속에서 무산계급에게 부담이 전가된 ‘이중의 전가’ 구조 위에서 이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일제강점기 강원도 지역 중등학교 설립 양상과 특질』,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2024)의 제2장 제3절과 제3장 제1절의 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임.

**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근현대사 전공)

루어진 식민지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주제어: 강릉, 중등학교 유치운동, 고등보통학교, 을중 농업학교, 이중 전가, 식민지 교육 배분

1. 서언

일제강점기 강원도 강릉지역의 중등학교는 총독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위로부터 배분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끈질긴 요구와 식민 권력의 억제·회유가 맞부딪친 자리에서 타협의 산물로 세워졌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었고, 도청 소재지 춘천 지역에 행정과 교육 인프라가 편중되었다. 영동지역의 중심지인 강릉은 유구한 역사적 위상과 풍부한 농·수산물의 생산력을 지녔음에도 중등교육기관의 부재로 교육 기회의 박탈과 문화적 소외를 겪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릉은 관립 고등보통학교 유치에 사활을 걸었으나 춘천에 고배를 마셨고, 결국 설립된 3년제 을중 농업학교는 지역민의 요구와 식민 권력의 절충이 낳은 대체재였다.

근대 중등학교는 지위 결정과 계급 상승의 핵심 기제였다. 개인에게 중등학교 졸업장은 과거 급제에 준하는 지위 획득의 수단이었고, 지역사회에는 외지 학생의 유입과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발전의 동력이었다. 그런 만큼 각 지역은 학교 유치에 치열하게 경쟁했고, 총독부는 이 경쟁을 설립 기부금을 모으는 동기로 역이용하여 재원 조달의 부담을 지역민에게 전가하였다.¹⁾ 지역사회의 대규모 자원과 관심이 투입되어 학교라는 공공재²⁾가 수립되는 이 과정은,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 어떻게 지역민의

1) 학교 설립비를 지역민의 기부금으로 전가하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한 총독부의 방식에 관해서는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1~33쪽, 제은숙, 『日帝下 朝鮮人의 中等學校 振興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63쪽, 69쪽을 참조할 것.

2)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공재’ 개념은 근대 국가가 공공재정으로 사회에 공급하는 이상

자기 부담 위에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한 지역민의 실천이 중등학교 설립 과정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중등학교 설립을 지역 간 관계와 총독부 정책 사이의 길항 속에서 통시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 영동 지역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개별 학교의 설립 현황과 졸업생 행보를 추적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구한말 영동 6개 지역에 세워진 36개 사립학교의 설립 실태를 정리하고 졸업생 다수가 면장·지방의원으로 진출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초등 단위 사립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한 데다 개별 학교 소개에 치중한 평면적 분석에 머물렀다.³⁾ 둘째, 강원도 최초의 직업학교인 삼척공립직업학교의 설립 배경과 교원·학생 현황, 졸업생 진로를 규명하면서 학교 유치를 둘러싼 삼척읍과 북삼면의 경쟁을 다루었다.⁴⁾ 셋째, 지역 유력자와 식민지 지방정치를 통해 교육 문제에 접근한 연구로 강릉의 중추원 지방 참의 崔準集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근대적 공공성이 일본 군국주의에 포획되는 과정을 규명하면서, 1920년대 초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 유치를 둘러싼 강릉과 춘천의 경쟁을 다루었다.⁵⁾

이 가운데 강릉의 중등학교 유치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세 번째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보 유치 경쟁은 최준집이라는 인물의 지역사회 활동을 서술하기 위한 소재로 동원되었을 뿐, 유치 운동 자

적 의미의 공공재와 구별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공립 중등학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고 공적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되었으나, 식민 권력은 ‘공립’이라는 외피 아래 설립 인가권, 운영 전권, 소유권을 독점했을 뿐 설립 및 운영 재정의 많은 부분을 지역사회의 사적 자산과 민간 기부금에 전가하였다. 즉 피지배 지역사회가 자기 부담으로 국가 인프라를 조성하되 그 통제권은 식민 당국에 귀속되는 모순적 성격을 지녔다. 본고는 이러한 식민 권력의 통제와 비용 전가의 결합 양상을 ‘공공재 수립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한다.

- 3) 장경호, 「1905~1910년 전후 강원 영동지역 사립학교 설립 현황과 졸업생들의 행보」, 『한국교육사학』43(1), 한국교육사학회, 2021.
- 4) 장경호, 「일제강점기 삼척공립직업학교의 운영과 졸업생의 활동」, 『江原史學』41, 강원사학회, 2023.
- 5) 이승렬, 「1930년대 중추원 주임 참의의 지역사회 활동과 식민지배체제-강원도 지방 참의 최준집의 사례: 군국주의에 포획된 근대적 공공성」, 『역사문제연구』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체가 규명의 대상은 아니었다. 학교 설립은 최준집의 계몽 활동과 친일 협력을 평가하기 위한 배경에 놓였고, 그 결과 유치를 이끈 다양한 주체와 그들의 전략, 총독부 중등교육 정책과의 길항, 그리고 고보 좌절에서 농업학교 설립에 이르는 전 과정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 따라서 강릉 지역이 십수 년에 걸쳐 전개한 유치 및 승격 운동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그리고 공공재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하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당시 발간된 신문과 조선총독부 관보, 각종 통계자료, 학교사, 인물자료 등 1차 사료를 교차 검증할 것이다. 특히 유치 집단의 陳情과 聲明, 총독부와 강원도 당국자의 담화를 대조하여, 표면에 내세운 명분과 그 이면의 의도를 함께 읽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릉이라는 단일 지역을 고보 유치의 좌절에서 을종 농업학교의 설립과 승격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지역민의 교육 기회 요구와 총독부 중등교육 정책이 반목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관립 고보 유치를 둘러싼 강릉과 춘천의 경쟁, 그리고 그 좌절 이후 강릉 내부의 사립고보 시도와 춘천공립농업학교(이하 춘천농교) 이전 운동의 대립을 식민 권력의 억제책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핀다. 다음으로 관 주도의 중재로 설립된 3년제 강릉공립농업학교(이하 강릉농교)의 구조적 한계와, 이에 맞서 지역사회가 끈질기게 전개한 갑종 승격 운동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식민 지배 체제 아래에서 지역 유치 집단이 ‘공익적 발전’이라는 지역적 명분과 사적 이해를 결합시켜 나간 과정과, 그 부담이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2. 관립 고등보통학교 유치 좌절과 유치 주체의 균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고보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종래 4년제 고보는 상급학교 진학 자격에 미치지 못해 그 효용이 기대에 못 미쳤으나, 5년제로의 연장은 그 한계를 없앴다. 고보가

전문학교와 제국대학 예과(일본의 고등학교)로 통하는 진학의 도약대가 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미설립 지역의 유치운동이 터져 나왔다.⁶⁾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1926년 본과의 설립 계획은 그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고보를 거쳐 제국대학에 이르는 진학 경로가 형식상 열렸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사회에서 고보는 두 층위의 효용을 지녔다. 개인에게 그것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다. 3·1운동을 거친 조선인 사회는 개인의 생존과 지위 획득의 무기로 근대지식을 인식했고, 지식인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중등학교 졸업장이라는 형식을 내세웠다. 그 결과 학교는 인격의 도야나 품성의 함양이 아니라 학력 취득의 장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학력 사회화 현상은 1920년대에는 ‘교육열’로, 1930년대에는 한층 심화된 ‘항학열’로 불렸다.⁷⁾ 한편 같은 중등학교라도 고보와 실업학교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다. 고보는 지위와 세력을 갖춘 유산계급의 자제가 다니는 곳으로, 실업학교는 고보 입시에 낙방한 자제의 차선택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재래부터 文을 숭상하고 業을 천시하는 四民觀이 작동한 결과였다.⁸⁾

지역사회에도 중등학교는 효용을 지녔다. 외지 학생의 유입은 하숙과 소비를 낳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학교는 도로, 상하수도, 병원 같은 도시 인프라 확충의 명분이 되었다. 학교가 곧 도시 발전의 동력원이었으므로, 미설립 지역일수록 유치 열망이 컸다. 전라북도 익산면 裡里가 그 전형이었다. 1922년 관립이리농림학교가 설립되자 학생 학자금과 학교 경영비가 매년 지역에 뿌려지는 자원이 되었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학부형은 지역을 알리는 ‘선전기관’이 되었다. 결국 중등학교 설립 하나가 도시 팽창을 견인하면서 1931년에는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하였다.⁹⁾

6) 박철희, 앞의 논문, 2쪽;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35쪽.

7) 「朝鮮教育界와 德育의 效果」, 『東亞日報』 1923.12.31; 「學校選擇問題特輯」, 『東光』 18, 1931.2.1.

8) 「學校選擇問題特輯, 學父兄諸位 各學校卒業生諸君에게」, 『東光』 18, 1931.2.1.

9) 山下英爾, 『湖南寶庫裡案內』, 1927, 58~59쪽(마쓰모토 다케노리, 윤해동 譯, 『조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고보가 설립되지 않은 강원도 각 지역의 유치 열망을 한층 증폭시켰다. 1922년 도내에는 3면 1교 정책의 완성으로 21개 군에 58개 공립보통학교(이하 보교)가 있었고, 그중 중등학교 진학이 가능한 6년제는 22개교였다. 이들 보교의 졸업예정자는 1923년 289명에서 1924년 723명으로 2.5배 급증했다.¹⁰⁾ 그러나 이들이 도내에서 진학할 곳은 보통학교 부설 고등과나 3년제 춘천농교, 강원도공립사범학교 뿐이었다.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으려면 고보가 설립된 타 도나 일본으로 유학해야 했고, 그것은 경제적 부담과 입시 관문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에 게만 열린 길이었다. 한편 고보는 도별 1개교만 두는 희소 자원이었으므로, 강원도 고보를 어느 군이 차지하느냐는 지역사회의 사활이 걸린 쟁점이 되었다. 더구나 태백산맥으로 영서와 영동이 지형적으로 분절되고 양 지역을 잇는 교통이 불편했던 만큼, 도내 1개 고보 방점은 두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는 유치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다.¹¹⁾

영동의 중심 도시 강릉은 일찍부터 고보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 논리는 강릉이 영동 6군의 중앙에 있고 물산과 인구가 풍부하며 인물과 문학의 발상지라는 효용론적 명분이었다. 이 명분은 한때 결실을 보는 듯했다. 1921년 봄, 申錫麟 도지사 재임기의 강원도 도평의회는 고보 설립지로 춘천과 강릉을 비교한 끝에 강릉을 적지로 결의했다. 판단 기준은 세가지였다. 전염병 환자가 춘천의 9분의 1에 불과한 健康地라는 점, 물가가 춘천의 절반이라는 점, 海路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었다. 결의는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영서지역 의원이 22명으로 영동지역 의원 9명의 2배를 넘었음에도 강릉이 선택되었다. 경원선에 인접한 영서북부의 철원, 이천, 김화, 회양, 평강군과 지리적, 정서적으로 영동지역과 가까운

선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68쪽 재인용); 朝鮮警察協會,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32, 77쪽.

10) 졸업예정자 수는 1922년 6년제 보교 5, 6학년 재학생 수를 적용한 추계이다. 강원도 보교의 6년제 승격은 1921년 춘천, 강릉, 원주, 철원 4개교, 1922년 18개교였다(『朝鮮諸學校一覽』 1922년판).

11) 영서와 영동의 분절과 교통에 관해서는 최승준, 『江原興地勝覽』, 을곡학회, 2009, 341쪽; 지역 갈등사례는 정성호, 「강원사회의 지역갈등: 영동·영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 1997, 81~82쪽을 참조할 것.

영서남부의 영월, 평창, 정선군이 강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²⁾ 이에 따라 도평의원 31명 중 강릉이 18표를 얻어 13표에 그친 춘천을 누르고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평의회는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였다. 강릉으로의 고보 설립지 결의는 식민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한 채 보류되었고, 강릉군의 준비는 수포로 돌아갔다.¹³⁾

강릉은 1922년 2월 재차 고보 설립 기성회를 조직했다. 지역 유지 80명이 발기해 朴起東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했고, 3월 총회에서 李根宇를 회장, 박기동을 부회장, 崔在璘을 총무로 하는 15인의 임원단을 선출했다. 이들 구성은 전직 강원도 참사, 현직 민·관선 도평의원, 대지주, 금융조합장, 문중세력이 중심이 되었다.¹⁴⁾ 기성회는 기본금 2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기로 했다가 이내 1년으로 단축했고, 영동 6군과 인접한 영서 3군(영월, 평창, 정선)에 후원회를 두어 총 8만 9천 원의 기부금을 배정했다. 기성회 조직과는 별개로 일본인 행정관료와 도평의원을 망라한 ‘강릉고보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는 일본인 관료와 선출직 도평의원을 총동원해 강원도와 총독부에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의도였다. 나아가 진정단을 上京시켜 총독과 정무총감을 방문하고, 강릉의 현안이던 주문진 축항비 기부금 문제를 고보 설립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유치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¹⁵⁾ 같은 시기 춘천에서도 기성회가 결성되어 고보 유치를 위한 기부금 경쟁이 가속화되었다.¹⁶⁾

이 경쟁 구도는 총독부가 의도한 것이었다. 총독부는 고보 설립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민 기부금으로 전가하고, 郡 간 경쟁을 유발해 더 많은

12) 영서 북부 5개 군이 강릉을 지지한 이유는 철로와 해로를 이용한 이동이 춘천보다 편리했기 때문이다.

13) 「江陵高普期成問題 總督府當局은 贊成한다」, 『朝鮮日報』 1924.6.26.

14) 「江陵高普 期成會」, 『每日申報』 1922.3.14. 당시 강릉지역의 조선인 유지 세력은 전주 이씨, 강릉 박씨, 강릉 최씨 등 지주와 문중 세력이 중심이었다(金興術, 『江陵의 都市變遷史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16쪽; 강릉문화원, 『강릉의 동족 마을』, 2012).

15) 「江陵高普 期成會 狀況」, 『每日申報』 1922.8.20; 「江陵高普 委員會」, 『每日申報』 1922.5.6; 「江原高等普通學校 新設, 陳情委員 入城」, 『每日申報』 1922.7.27.

16) 「春川高普 期成」, 『東亞日報』 1922.3.18; 「高普期成 發起 總會」, 『東亞日報』 1922.4.16.

재원을 민간에서 추렴하려고 했다. 사립고보를 세우려는 지역의 자금은 관립 설립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했고, 고보가 입지하지 않은 군에도 기부금을 할당했다.¹⁷⁾ 강릉기성회가 기본금 20만 원을 각출하고 향교 재산과 모범장 수입까지 계상한 것도 이러한 방식의 산물이었다. 중등학교라는 공공재는 국가가 아니라 거액 기부자와 지역 유지 세력의 사적 재원이 다액 포함되었으며, 이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 중등학교 설립의 전형으로 작동하였다.¹⁸⁾

1923년 2월 도지사가 신석린에서 尹甲炳으로 교체되면서 고보 설립지에 대한 국면이 급변했다. 윤갑병은 고보를 도청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도평의원을 한 명씩 회유해, 그해 3월 고보 위치를 춘천으로 결정했다.¹⁹⁾ 강릉기성회는 곧장 성명을 내어 반발했다. 도청 소재지가 고보 입지의 특권이 될 수 없다며 함경북도 鏡城과 경상남도 東萊가 도청 소재지가 아님에도 고보가 설립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경성은 도청 소재 면의 이전에 따른 보상책이었고 동래는 사립의 관립 전환 사례여서 반박 논거가 되지 못했다.²⁰⁾ 강릉은 마지막 수단으로 1923년 10월 사이토(齋藤實) 총독의 강릉 시찰을 활용했다. 군민 1천 명을 동원하고 祝燈 400여 개를 거리에 내걸었으며, 회장 최재린이 총독과의 면담을 청해 구두로 진정했다. 이 자리에서 사이토는 관립 고보는 도청 소재지 춘천에 둘 수밖에 없으나 강릉은 제2 후보지이며 사립고보라면 찬성하겠

17) 박철희, 앞의 논문, 31~33쪽. 학교 설립 재정의 민간 전가는 당시 일본 제국대학 설립에서도 나타났다(아마노 이쿠오, 박광현·정종혁 譯, 『제국대학』, 산치림, 2017, 38~50쪽).

18) 기부금 전가와 지역 경쟁 유발이 강원도만의 현상이 아니었음은 충청남도 공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총독부는 대전, 공주, 연기, 홍성, 천안 등 5개 군의 유지 경쟁을 유발해 공주고보(1922) 설립비 상당액을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했고, 그 잔여 예산으로 일본인 학교인 대전고등여학교를 설립했다(박철희, 앞의 논문, 33쪽).

19) 「江陵高普期成問題 總督府當局은 贊成한다」, 『朝鮮日報』 1924.6.26. 도청 소재지론은 윤갑병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총독부 학무당국의 방침 수행이었다(「明年度の諸般施設」, 『東亞日報』 1922.12.23).

20) 「江原道에 高普가 되면 江陵이 最適地」, 『東亞日報』 1923.8.28; 朝鮮總督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1,061쪽. 1925년 설립된 진주고보 역시 진주에서 부산으로의 도청 이전 보상책으로 결정된 사례였다.

다고 답했다. 이 발언으로 강릉의 운동은 관립 유치에서 사립고보 설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²¹⁾

강릉의 고보 유치 좌절은 두 층위에서 설명된다. 하나는 기성회 조직 역량의 열세였다. 강릉기성회가 문중과 지주를 중심으로 효용론적 명분에 치중한 데 반해, 춘천기성회는 행정, 상업, 언론, 법조를 아우르고 半官半民의 퇴직 관료와 일본인 지역 유지를 임원에 두어 對官 로비를 입체적으로 전개했다.²²⁾ 그러나 더 근본적인 층위는 도청 소재지 우선이라는 총독부의 배치 원리였다. 총독부는 도청 소재지에 고보를 둬으로써 총독부 학무국에서 도 내무부 학무과로 이어지는 계통을 통해 소수의 고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는데, 특히 3·1운동에서 중등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경험 이후 사상 통제와 학생 지도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다.²³⁾ 강릉의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명분이 아무리 타당해도 이 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관립 고보 유치가 좌절되자 강릉기성회는 사립고보 설립을 강력한 대안으로 내걸었다. 1924년 5월 10일 강릉보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지들은 기존 유치 활동으로 모금한 20만 원에 20만 원을 증액한 총 40만 원을 조성해 사립고보를 건립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함께 발표된 선언서는 식민 권력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반도의 人心을 기초로 양성할 사상 문제나 전 민족의 생명을 지지할 산업 문제도 결국 교육에 기원을 미치지 아니치 못할지라 (중략) 우리의 목적을 관철치 못함은 본회 사업 진전의 潛的 또는 露的으로 多大한 拘碍를 일으키었으니, 우리들은 이에서 분연히 일어서 우선 본회에 장애되는 모든 여

21) 「江陵高普 문제 總督에게 陳情」, 『每日申報』 1923.10.24. 관립고보 확정 = 「淸州와 春川에 高普 新設 確定」, 『東亞日報』 1923.12.13을 참조.

22) 「高普期成 發起 總會」, 『東亞日報』 1922.4.16.

23) 이명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기구 변천과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59~60쪽; 안홍선, 앞의 책, 426~427쪽. 1911~1936년 설립된 공립 고보 16개교는 동래·진주·안주를 제외하면 모두 도청 소재지에 입지했다(『朝鮮諸學校一覽』 1937년판).

건을 배척하기로 이에 선언함.²⁴⁾

강릉기성회는 이 선언에서 고보 유치 실패의 원인을 총독부의 학교 설립 정책에서 찾았다. 교육을 통해서만 민족의 발전과 문화의 개발, 산업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원천인 학교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민중적 지지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 강릉기성회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유치 운동을 벌여 온 터였고, 40만 원이라는 거액은 그간 적립한 기본금에 향교 재산과 유지 각출을 더해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어 기성회는 장문의 결의문을 통해 유치 실패의 원인 제공자인 도지사 윤갑병에 대한 배척을 천명했다. 강릉기성회가 윤갑병을 지목한 것은, 전임 신석린 도지사 재임기 도평의회가 강릉을 고보 적지로 정했음에도, 1923년 부임한 윤갑병이 여론을 무시하고 도평의원을 압박해 위치를 춘천으로 바꾸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배척과 함께 강릉기성회는 총독부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주문진 축항의 지역 분담 기부금 출연을 일시 거부하는 초강경책을 선택했다.

주문진항은 부산과 원산 사이에 위치한 이출입항이자 함경북도 雄基와 일본 한신(阪神) 항로의 기항지로, 동해안의 중요한 해양 거점이었다. 축항 사업은 국비 8만 원, 지방비 8만 원, 지역민 기부금 8만 원 등 총 24만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었는데, 지역민 기부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총사업비의 3분의 1이 결손되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축항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일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을 뿐, 조선인에게는 기부금 부담만 있고 중등학교처럼 직접적 이득을 주는 사업은 아니었다. 강릉의 유지들이 “일본인 측은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조선인에게는 학교 설립이 급선무”라며 축항 기부금 납부를 거부한 까닭이다. 강릉기성회는 이 기부금을 지렛대 삼아, 축항 사업의 진행을 조건으로 사립고보 인가를 얻어내려 했다. 국책 사업의 성패를 쥔 지역민의 재원을 협상 카드로

24) 「江陵高普期成會의 宣言書 發表」, 『每日申報』 1924.5.18.

내건 것으로, 관의 재정 전가 구조를 역으로 이용한 셈이었다.²⁵⁾

교섭은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기성회 간부 崔準集은 상경해 총독부 정무총감, 내무국장, 학무과장을 잇달아 방문했고, 강릉 출신 일본 유학생 모임인 金剛俱樂部도 교섭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독부는 설립에 필요한 예산만 갖추어지면 요구에 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강원도 당국과도 협상을 통해 도지사 윤갑병이 사립고보 기성회 회장직을 맡는다는 승낙을 얻어 내었고, 내무부장 이즈미(泉崎三郎)로부터는 강릉을 방문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당시 강릉의 신흥 자산가로 부상하던 최준집이 교섭의 전면에 나선 것은, 문중·지주 중심의 기성회 안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사업가적 교섭력을 갖춘 세대가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30년대 후반 강릉공립상업학교 유치에서 그가 수행할 역할의 예고편이기도 했다.²⁶⁾ 1924년 8월 25일 이즈미는 강릉을 방문해 기성회 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강원도 당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부득이 본년 4월에 춘천에 (고등보통학교가: 필자 주) 설치되었지만, 본인은 오히려 영동에 1교를 증설함에 극히 동정에 뜻을 표할 뿐만 아니라 (중략) 관립으로는 본부에서 승인할는지 문제입니다. (중략) 본부에서도 재정을 축소함에 따라 결코 1도에 2개소는 불가능이라 합니다. (중략) 재정 축소와 행정 정리를 결행하여 2년 후면 넉넉하게 관립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2, 3년만 기대하면 그때에는 不勞得之를 豫期하기를 본인은 충심

25) 「注文津 築港竣工式」, 『東亞日報』 1926.11.25; 「江陵高普 問題로 知事 排斥 嶺東六郡에서」, 『時代日報』 1924.6.27.

26) 「江陵高普 期成問題 總督府 當局은 贊成한다」, 『朝鮮日報』 1924.6.26; 「高普委員과 道 當局」, 『朝鮮日報』 1924.7.5. 최준집(1893~1970)은 강릉 출생으로 메이지(明治)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강릉으로 돌아와 실업계에 종사하며 江陵合同釀造 사장, 江陵陸運 사장, 麵子 사장, 江陵自動車 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정치 분야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강원도회 의원, 강릉읍회 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고, 특히 강릉농교, 강릉상교, 강릉고등여학교 등 일제강점기 강릉지역 중등학교 설립에 주요 인사로 참여하였다. 해방 후에도 江陵合同酒造社長을 지내며 강릉 지역 유력 경제인이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

으로 찬성합니다.²⁷⁾

이즈미는 영동에 고보 증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도 1고보 정책은 변경할 수 없다며 관립 불가의 책임을 총독부 방침으로 돌렸다. 이는 강릉기성회가 제기한 도지사 책임론을 무마하려는 것이었다. 사립고보에 대해서도 막대한 비용과 지역민 부담을 걱정하는 듯했으나, 그 이면에는 주문진 축항비 기부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중이 있었다. 축항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립고보를 차후 과제로 유예하고자 한 것이다. 2, 3년만 기다리면 지역민 부담 없이 국비로 관립고보가 가능하다는 말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었으나, 1도 2고보가 불가능하다는 앞의 언명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임기응변에 불과했다.

이 회유책은 강릉기성회의 분열을 불러왔다. 총독부와 강원도 당국의 태도에서 사립고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세력이 또 다른 대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들의 전략은 강원도에 기설된 3개 중등학교(고보·농업·사범)가 모두 춘천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중 농업학교를 강릉으로 이전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1924년 9월 10일 강릉보교에 각 면의 유지 50~60명이 모여 ‘춘천농업학교 강릉이전기성회(이하 춘천농교이전기성회)’를 결성하고 27명의 임원을 선출했다.²⁸⁾ 회장 박기동은 대한제국기 강원도 관찰부 주사와 강릉군 참사를 지낸 문중세력으로 직전 강릉기성회 부회장이었고, 부회장 李根周는 강릉소작지 회장에 있던 전주 이씨 대지주였으며, 고문 이근우는 船橋莊 주인이자 강원도 참사·민선 도평의원을 지낸 전주 이씨 문중의 대표적 대지주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릉 토착 문중세력이자 농업을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한 대지주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농업학교 이전을 택한 데에는, 강원도에서 米作 수확량이 가장 많은 강릉군의 이점을 살린다는 명분과 함께, 농

27) 「現狀에 鑑하여 江陵高普 二, 三年間 期待, 泉岐 內務部長 聲明」, 『每日申報』 1924.9.3.

28) 「春川農校 江陵移轉期成會」, 『每日申報』 1924.9.16; 「農校移轉 期成」, 『時代日報』 1924.9.20.

업학교 이전에 따르는 농업기술 인력 양성이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계산이 있었다. 사립고보 노선과 농교 이전 노선의 대립은 이러한 문중·지주 세력 내부의 균열이기도 했다.²⁹⁾

1924년 12월 신임 도지사 朴榮喆이 취임 차 강릉을 방문해 두 기성회 대표를 면담했다. 그는 춘천농교 이전에 대해, 이미 춘천에 설립된 학교의 이전은 강원도 당국의 체면을 손상하고, 영서지역의 격렬한 반대 운동을 부르며, 한번 정한 학교를 옮길 만한 명분이 없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학교 하나를 둘러싼 영동과 영서의 대립을 도 당국으로서는 더 키울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강릉의 신설 중등학교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분란 중인 두 기성회가 하나로 통합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중등교육기관 설립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릉군수 尹希聖도 도지사의 발언을 재차 인용하며 두 기성회를 폐지하고 하나로 연합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도지사의 언명에는 신설 중등학교를 언제 어떤 중별로 세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과거 고보 유치 과정의 전례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춘천농교이전기성회는 재차 논의했으나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근우, 沈東燮을 진정위원으로 뽑아 도평의회를 통한 정치적 교섭으로 강원도 당국을 압박했다.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일지언정 도평의회는 도 당국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통로였으므로, 도평의원을 겸한 대지주들이 이를 활용한 것이다.³⁰⁾

두 기성회의 대립은 강릉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지역 언론은 강릉 사회가 兩班과 常人, 신진세력과 구세력, 도시세력과 농촌세력으로 나뉘어 있음을 지적하며, 두 기성회의 당파적 투쟁과 분열을 비판했다.

29) 「江陵小作支會 創立」, 『朝鮮日報』 1923.9.4. 1923년 강원도 미작 상위 3개 군은 강릉(79,453석), 양양(65,535석), 철원(65,359석) 순이었다(江原道, 『統計圖集』, 1923).

30) 「江陵高普는 有望 道知事가 設立할 것을 聲明, 春川農校 移轉은 絶對 不能」, 『朝鮮日報』 1925.2.6; 「江陵農校 期成, 道에 陳情 決意」, 『東亞日報』 1925.2.11.

지금 제군들의 주장하는바 농교 이전이니 고보 설립이니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함인가? (중략) 제군의 주장하는 동기가 명예욕에 驅使됨이 아닌가 의심한다. 진실로 교육을 위한다면 제군의 금일과 같은 당파적 행동을 취하지 아니함이 옳지 않은가.³¹⁾

이러한 언론의 비판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총독부의 중등학교 설립 억제책에 있다는 구조적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었다. 마치 총독부는 강릉에 학교를 세우려 노력하는데 두 기성회의 갈등이 그것을 지체시킨다는 듯한 인식이었고, 유지들의 노력을 명망 추구 행위로 매도한 것이었다. 그것은 두 기성회의 활동을 갈등의 측면에서만 부각했을 뿐, 총독부와 강원도 당국이 중등학교 설립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본질은 읽지 못한, 현상만의 적시였다. 오히려 지역 언론이 지적한 양반과 상인, 신진과 구세력, 도시와 농촌의 분화는, 유치 노선의 대립이 강릉 유지집단 내부의 사회적 균열과 겹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두 기성회의 갈등은 유지집단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역량을 모아 식민 권력에 대항해 더 빠른 시일에 중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실행 의지의 표현이었다. 고보 설립이라는 인문 노선과 농업학교 이전이라는 실업 노선은, 어느 경로가 더 현실적인가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 밑바탕에는 지역민이 실업학교보다 인문학교를 선호하는 뿌리 깊은 경향이 있었다. 강릉이 관립고보 실패 후에도 곧바로 사립고보 설립을 재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농교 이전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대안이었음을 말해 준다. 교착이 길어지자 개입한 것은 읍이었다. 강릉군수 윤희성은 두 기성회를 배제하고 강릉군청 차원에서 강원도 당국과 직접 교섭에 나섰고, 그 결과 분열되었던 강릉의 중등학교 유치 운동은 1925년 관 주도의 단일 기성회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관이 설정한 그 틀은 지역민이 바라던 고보가 아니라, 총독부가 의도한 농업학교로 귀결될 통로이기도 했다.³²⁾

31) 「江陵社會에 一訴함」, 『朝鮮日報』 1925.2.27.

32) 「江陵中等校 期成, 高, 農 兩 期成會가 合同 活動」, 『朝鮮日報』 1925.5.30; 「江陵郡

3. 관 주도 타협과 을종 농업학교 체제의 차별 구조

전술한 것과 같이 사립고보 노선과 춘천농교 이전 노선으로 갈린 두 기성회의 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도지사 박영철이 통합을 전제로 신설을 허가하겠다고 못 박자, 사태 해결의 열쇠는 관으로 넘어갔다. 강릉군수 윤희성은 민간 기성회를 배제하고 강릉군청 차원에서 강원도 당국과 직접 교섭하여 세 가지 요구안을 마련했다. 첫째, 강릉군 내 5개 보교 중 6년제는 1개교에 불과하여 향후 중등학교가 설립되더라도 단일 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운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3개 보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할 것. 둘째, 학교 설립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니, 그때까지 보교 졸업생의 진학난을 구제하기 위해 사설 ‘首善講習所’에 중등과를 두고 강원도가 매년 3백 원을 보조할 것. 셋째, 기성회장을 민간이 아닌 강릉군수가 맡고, 지역 기부금은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었다.³³⁾

이 제안은 중등학교 입학 자격을 갖춘 졸업생을 미리 확보해 입학 수요를 충족한 뒤 학교 설립을 요구하자는 우회 전략이었다. 첫째 안은 이듬해인 1926년 신리, 옥계, 성산보교의 6년제 승격으로 구체화되었고(사천보교는 1929년), 이는 중등학교 설립의 유의미한 추진 신호였다.³⁴⁾ 둘째 안, 곧 수선강습소 중등과 설치에 진학난을 임시로 무마하려는 미봉책이었다. 그러나 이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 안이었다. 군수가 기성회장을 맡아 민간 주도를 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민이 바라

兩校 期成 併合, 오는 27日 創立, 『東亞日報』 1925.10.23.

33) 「江陵中等校 期成, 高, 農 兩 期成會가 合同 活動」, 『朝鮮日報』 1925.5.30. 수선강습소는 1922년 6월 강릉군내 유치 崔命台, 崔台集, 曹琦煥, 曹主大, 沈相駿의 맡기로 강릉향교 명륜당에 설립된 사설학교로, 향교 재산 보조와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1925년부터 속성중등부를 두어 250여 명을 모집했다가 1927년 강릉농교 설립 계획으로 폐교되었다(「江陵 首善講習所 內容 擴張과 生徒 募集」, 『每日申報』, 1925.3.9; 「江陵首善講習所 擴張에 努力」, 『每日申報』, 1925.10.31; 「朝鮮 各 學校 卒業式」, 『朝鮮日報』, 1927.3.26; 「農校開設로 首善講習廢止 卒業은 第四回로」, 『每日申報』, 1927.3.28).

34) 『朝鮮諸學校一覽』 각년도판.

는 고보 요구 여론을 억제하면서 총독부가 의도하는 실업학교 설립 계획을 관철하려는 통제 장치였다. 수선강습소 중등과 역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 과정이었으므로, 진학 수요 계층의 불만을 임시로 달래는 미봉책 그 이상은 아니었다. 강릉의 유치 운동이 관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종착지가 지역민의 바람과 어긋날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셈이다. 군수의 교섭이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1925년 5월 24일 양 기성회는 총회를 열어 통합안을 가결했고, 같은 해 10월 27일 ‘강릉중등학교 속성기성동맹회(이하 속성동맹회)’로 단일 출범했다.³⁵⁾

관 주도로의 전환은 강릉이 처한 구조적 제약과도 맞물려 있었다. 총독부의 사립학교 억제책 아래,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사립 중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남도뿐이었다. 막대한 설립비를 감당할 지역 경제력과 입학 수요를 채울 인구가 부족했던 사정도 겹쳤다. 즉 사립고보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강릉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관을 매개로 한 공립학교 유치뿐이었고, 그 매개권을 쥔 것은 강원도 당국이었다. 그러나 통합 후에도 강원도 당국은 학교 설립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통합만 성사되면 곧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강원도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 없이 1년을 미루었다. 관이 통합을 종용한 것과 이후 설립을 미룬 것 사이의 간극은, 지역의 열망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붙잡아 두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1926년 10월 24일에야 새로 부임한 강원도 내무부장 고니시(小西恭介)가 강릉을 방문해 총독부의 방침을 통보했다.

강원도는 地勢上 및 면적상 영동, 영서로 구분되어 흡사 2도의 觀이 있고 원래 강릉에서 열렬히 희망하던 바도 고등보통학교였었는데 이 고등보통학교는 재정이 극히 곤란하고 지방 개발상에도 그리 적당치 못한 고로 현 조선의 1도 1교인 방침을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략) 총독부 산업 장려 주지에 순응하고 강릉지방에 적당한 학교는 결국 농업학교라는 결론을 지

35) 「江陵君 兩校 期成 併合, 오는 27日 創立」, 『東亞日報』 1925.10.23.

었는데 (중략) 내무부장은 경비 상 관계로 5년제 농교는 될 수 없고 3년제 농교로 함이 여하하나.³⁶⁾

고니시는 1도 1고보주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춘천고보 분교 설치 는 교육의 질과 재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고보 설립을 불허하 고, 강릉의 농업 생산과 연계한 3년제 을중농업학교로 가닥을 잡았다. 앞 서 강릉군수가 교섭한 중등학교 설립은 실현을 보게 되었으나, 애초 고 보에 상응하는 규모나 수업연한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영동과 영서가 ‘2도의 관’을 이룰 만큼 이질적이라는 인식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그 격차 를 해소할 고보 설립은 재정과 지역 개발 계획을 핑계로 도외시킨 채, 총 독부의 식민지 산업화 정책에 부합하는 실업학교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지역민의 열망을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치환하는 이 논법은, 인문 중 등교육을 억제하려는 총독부 정책의 축소판이었다. 1926년 11월 속성동 맹회는 총회를 열어 강원도 당국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민이 바 라던 고보가 좌절되고 을중농교로 낙착되는 데 대해 이견이 없지는 않았 으나, 5년을 끌어온 유치 운동을 더는 무산시킬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앞섰다. 도 당국은 을중농교 설립에도 조건을 붙였다. 임시 설립비 약 14 만 원 중 강원도는 2만 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12만 원을 전액 지역민 기 부금으로 충당하되, 그해 11월 말까지 기부금 모금 계획을 담은 지방민 결의서를 제출해야 1927년도 예산에 편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2년 전 내무부장 이즈미가 “재정 축소와 행정 정리를 결행하여 2년 후면 너 너하게 관립이라도 할 수 있다”라며 강릉의 재원도 풍부해질 것이라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2, 3년만 기다리면 지역민 부담 없이 국비 관립고보가 가능하던 회유는, 2년 뒤 지역민에게 12만 원을 떠넘기는 을중농교 조건으로 되돌아온 것이다.³⁷⁾ 관의 약속은 국면마다 자의적으 로 번복되었다.

36) 「農業校 設立 計畫」, 『東亞日報』 1926.10.31.

37) 「現狀에 鑑하여 江陵高普 二, 三年만 期待, 泉岐 內務部長 聲明」, 『每日申報』 192 4.9.3.

14만 원 설립비 가운데 도가 내놓는 몫은 7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 7분의 6을 지역민이 짊어져야 했다. 게다가 한 달여 만에 12만 원 모금 계획서를 결의해 내라는 조건은, 지역의 절박한 열망을 담보로 재정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상황은 아니었다. 당장 1927년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 당국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다. 속성동맹회는 강릉향교 재산 수입 2만 원, 강릉모범장 매각 대금 2만 원, 강릉군내 부담 기부금 4만 원, 기타 기부금 4만 원 등 12만 원의 모금 계획을 세우고, 이근우, 최재린, 박기동과 각 면장, 유력자, 일본인 유지 등 28명의 연명 서류를 작성해 1926년 11월 26일 강릉농업학교 설립 기부 원서를 강원도 당국에 제출했다.³⁸⁾ 여기서도 학교 설립의 재원이 향교 재산과 모범장 매각 대금, 유지 기부금이라는 지역 자산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모범장은 1910년대 중반 강릉 주민이 기금을 모아 국유지와 역둔토를 매입해 설치한 농사 권업 기구였는데, 1927년 7월 장장 이근우와 총무 최재린 등 평의회원과 각 면장·유지 20여 명이 모여 이를 공정한 시가로 매각해 농교 설립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³⁹⁾ 주민 공유의 자산이 학교라는 공공재의 설립 재원으로 전용된 것이다. 그러나 기부원서 제출에 따라 열린 1927년 1월 21일 강원도 도평의회 본회의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高運河(철원)씨는 주문진 축항 시에 지원(강릉:필자 주) 주민의 8만 원 기부금이 무성의하게 된 지금, 당국은 어떤 까닭으로 농업학교, 자혜병원을 (강릉에: 필자 주) 신설하는가 하는 질문에 (중략) 崔圭璫(양구)씨는 (중략) 기부금 부족 1만 2천 원을 지방비가 기채했으니 그 이자까지라도 지원 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다. (중략) 金鶴植(평강)씨는 강릉 의원이 기부금 수입을 보충치 않으면 당국은 강릉농교 신설의 특전을 철폐할 것이다 (중략) 각 의원 주거나 반거나 갑론을박으로 의회가 소란하였다.⁴⁰⁾

38) 「江原道 江陵에 農業校 設立 十二萬圓의 寄附로 明年度에 實現」, 『每日申報』 1926.12.1.

39) 「問題의 模範農場 基地 農學校에 寄附, 評議會에서 決定」, 『每日申報』, 1927.7.15.

40) 「議員의 論戰으로 時修羅場化, 所得업는 甲論乙駁, 江原道平議會 續報」, 『每日申

이날 안건은 1925년 지방비 세입·세출 결산이었다. 철원 의원 고운하는 1924년 고보 유치 실패 후 강릉기성회가 사립고보 인가를 조건으로 축항 기부금 출연을 거부했던 사정을 겨냥해, 농업학교 설립이라는 결과 이전에 주문진 축항 기부금 완납의 책임부터 지라고 요구했다. 양구의 최규선과 평강의 김학식은 기부금 부족분을 강원도가 지방채로 감당했으니 미납금과 이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농교 설립을 철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강릉 출신 박기동은 관동대지진과 水災, 旱災로 모금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본인이 책임지고 징수하겠다고 방어했고, 강릉의 일 본인 의원 다나카(田中) 역시 같은 변명을 되풀이했다. 회의는 각 의원이 주거나 받거나, 감론을박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발언들의 행간에는 중등학교라는 희소한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데 강릉이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중등학교가 지역사회에 유·무형의 이익을 매개하는 사회간접자본임을 아는 도평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처지에서 강릉으로의 학교 설립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지역이 차지하느냐가 곧 지역 간 이해 충돌이 되는 구조 속에서, 도평의회는 강릉의 축항 기부금 미납을 지렛대 삼아 학교 배분의 형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1921년 고보 유치 표결에서 각 군이 이해관계를 따져 움직였던 것과 같은 논리의 연장이었다.

특혜 논란에도 설립은 최종 결의되었으므로, 다음 문제는 기부금 모금이었다. 1927년 2월 14일 속성동맹회는 강릉군이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강릉군 8만 원, 인접 8개 군(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영월, 평창, 정선) 4만 원 분담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강릉군 8만 원의 내역이었다. 군내 지역민 기부금 6만 원, 모범장 매각 대금 1만 2천 원, 향교 수입금 3천 원 등으로 짜였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유지집단이 감당하기로 한 기타 기부금 4만 원은 삭제된 반면, 군내 일반 부담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6만 원의 각출은 소유 토지 가격에 비례해 분담하되, 토지 없는 재산가는 지가할을 표준으로 징수하고, 일반

빈궁자에게도 매호당 30전씩 징수하기로 했다.⁴¹⁾ 유지집단이 감당해야 할 몫을 지역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 전가는 곧 실행 국면에서 계급적 성격을 드러냈다. 강릉 주재 동아일보 기자는 유지집단의 위선을 통렬히 고발했다.

기부금 징수 고지서는 벌써 몇 달 전에 분배를 하여 놓고 (중략) 금번 蠶 蠶 판매 기회를 이용하여 (중략) 고치 값을 모모면에서는 농교 기부금으로 공제한 면까지 있었다 한다. (중략) 경제력이 전혀 없어서 생명까지 유지하기가 극히 곤란한 빈민에게는 대체로 징수가 되었다 한다. 그러면 중류 이상의 (중략) 자산가들에게 어찌하여 아직도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가 (중략) 특히 열성이 많다는 간부 중에도 이근우, 최재린, 최돈승 3명을 제외한 외에는 아직도 대부분이 내지 아니하였다 한다.⁴²⁾

무산계급에게는 농외 수입원인 잡업 수매가액에서 기부금을 원천 공제하면서, 정작 자녀가 중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유산계급은 납부를 기피했다. 무산계급은 애초 중등교육의 기회를 접할 경제적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그들에게서 먼저 거둔 것은 억울한 처사였다. 유산계급은 유치 과정에서 사회적 명망을 좇는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계층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이 이처럼 어긋났다. 강릉 지역사회에서도 유지집단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나, 기부금 모금의 실권을 쥔 것도, 학교의 혜택을 먼저 누릴 것도 결국 그 유지집단이었다. 앞 장에서 확인한 ‘유치 기부금’의 전형은, 실제 국면에서 유지의 명망 획득과 무산계급으로의 부담 전가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작동했다. 국가가 마땅히 부담할 학교 설립비를 지역에 전가한 총독부의 정책이, 지역 안에서 다시 강자에서 약자로 전가되는 연쇄를 낳은 것이다. 식민지 공공재의 조성은 이처럼 이

41) 「江陵에 農校 設立 乙種農校로 道 評議會서 決定」, 『東亞日報』 1927.2.22; 「江陵郡 民大會 農校 寄附金 辦出 方法 協議」, 『東亞日報』 1927.3.7.

42) 「農校期成會幹部諸氏에게」, 『東亞日報』 1927.7.28.

중의 전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비판 여론에도 8만 원은 기한 내 완납되지 못했고, 1927년 가을로 예정된 개교는 무산되었다. 강원도 당국은 1928년 3월 15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 예산을 삭제하고 연기하겠다고 위협했고, 속성동맹회는 춘궁기임에도 무산 농민에게 각출을 종용해 기일 내 완납시켰다. 1928년 5월 강원도 학무당국은 지역 부담 8만 원과 도비 2만 원 등 10만 원을 확보해 설립 인가 수속을 총독부에 제출했고, 6월 15일 강릉면 玉川町에 강릉공립농업학교(이하 강릉농교) 설립 인가가 고시되었다.⁴³⁾ 1928년 봄 입학시험에 800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릴 만큼, 을중 학교의 한 계에도 불구하고 강릉의 중등교육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강릉군은 신입생 55명을 모집해 7월 1일 임시 개교하였다.⁴⁴⁾ 이후 10월 31일 착공한 옥천정 교사가 완공된 1930년 5월 28일 향교에서 신축 교사로 이전했다. 관립 고보 유치 실패로부터 5년, 강릉이 얻은 것은 지역민이 바라던 인문 중등학교가 아니라, 지역민의 향교 재산과 공유 자산, 그리고 무산계급의 호별 부담으로 세운 3년제 을중농업학교였다.⁴⁵⁾

강릉농교가 3년제 을중으로 확정된 순간, 그 종별은 곧 구조적 차별의 출발점이 되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실업학교는 고등교육 기관 진학 자격이 주어지는 5년제 갑종과 종결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 3년제 을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2년제 보습학교로 위계화되었다. 총독부는 도청 소재지의 1개 농교만 갑종으로 두고 그 밖의 신설 농교는 을중으로 묶어, 갑중-을중-보습의 서열을 유지했다. 갑종과 을중은 같은 실업 중등학교였지만 3년과 5년이라는 수업연한의 차이는 사회적 지위를 크게 갈라놓았다. 1920년대가 학력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증명하는 학력사회로 진입하는 국면이었던 만큼, 2년의 수업연한 차이는 졸업 후 사

43) 『朝鮮總督府官報』 제440호, 1928.6.18.

44) 「募集生四十名에 志願者八百名」, 『中外日報』 1928.4.7.(본문 ‘8백 원’은 ‘8만 원’의 오타임); 「江陵農校 六月中 開校?」, 『東亞日報』 1928.5.27; 「江陵農校 開校式舉行來月一日에」, 『每日申報』 1930.9.28. 당시 기사에는 신입생 모집 정원은 40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 입학생은 55명이었다(<표 2> 자료 참조).

45) 「江陵農業學校 落成式舉行」, 『每日申報』 1930.6.2.

회생활 전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1> 관·공립농업학교 갑종·을종별 상황(1929)

구분	갑종학교명(설립년)	을종학교명(설립년)	을종학교→갑종학교(승격년)
경기도	京城(1918)		
충청북도	청주(1911)		
충청남도	공주(1910)		
전라북도	이리(1922)	전주(1910), 정읍(1910)	전주(1931), 정읍(1939)
전라남도	광주(1910)	제주(1920)	제주(1940)
경상북도	대구(1910)	상주(1921)	상주(1940)
경상남도	진주(1910)	김해(1927), 밀양(1924)	김해(1941), 밀양(미승격)
강원도	춘천(1910)	강릉(1928)	강릉(1939)
황해도	사리원(1911)		
평안북도	의주(1911), 영변(1911)		
평안남도	평양(1910), 안주(1914)		
함경북도	경성(1918)	길주(1925)	길주(1942)
함경남도	함흥(1910)	북청(1910)	북청(1940)
계(24교)	15	9	

·자료 : 『朝鮮諸學校一覽』 1929년, 1940년, 1941년, 1942년에서 작성함.

<표 1>에서 보듯 1910년대 설립 농교는 대부분 도청 소재지의 갑종이었고, 1920년대 설립 농교는 모두 을종이었다. 총독부는 도청 소재지 갑종 1개교 외의 농교는 을종에 묶고 그 승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위계를 유지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실업학교 학제가 일본과 같이 3년제 또는 5년제로 바뀌면서, 1910년대에 설립된 도청 소재지 농교는 이리농림학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제 갑종으로 승격되었다. 반면 1920년대에 새로 설립된 농교는 예외 없이 을종에 머물렀다. 전주·정읍·북청농교는 1910년 설립임에도 갑종에서 제외되었는데, 도내에 이미 관립 농림학교(이리)나 도청 소재지 농교(함흥)가 있어 1도 1갑종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다. 이 위계는 상급학교 진학 자격·취업·지위·급여의 격차를 낳았으므로, 을종 소재지마다 동등한 교육기회를 요구하는 승격 운동을

이 지역 유지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전주, 정읍, 제주, 상주, 김해, 밀양, 길주, 북청 등 전국의 을중농교 소재지에서 예외 없이 승격 운동이 전개된 것은, 을중이라는 중별이 지역사회 전체에 부과한 차별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보여준다.⁴⁶⁾

강릉농교는 개교 당시부터 차별에 직면했다.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인 영어 과목이 을중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학생들이 갑종 승격에 대비해 과목 개설을 요구했고 개교 두 달 뒤인 1928년 9월 5일 도 당국의 승인으로 개설되었다.⁴⁷⁾ 이러한 조처는 갑종 승격 기대를 낳았으나, 여전히 을중에 머무른 탓에 1929년 2회 입시에서는 개교 첫해보다 지원자가 감소했다. 학교 당국조차 을중이기 때문에 학생 지원이 저조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⁴⁸⁾ 1932년 12월 도지사 李範益이 방문했을 때 유지집단은 승격을 진정했고, 이범익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유지집단은 승격 기금 약 8천 원을 모금하고, 1933년 중 승격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강릉군 당국의 찬성서를 제출했다. 강원도 당국도 승격을 전제로 총독부와 협의에 들어가 1933년 도 지방비 예산에 승격 경비를 계상했다. 승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에 1933학년도에는 지원자가 격증했고, 학교 당국은 1학년을 대상으로 갑종학교 교과서를 쓰며 연내 승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총독부의 결정이 지연되자, 승격을 믿고 등록했던 신입생 학부모들이 자녀 전학을 선언하는 파동이 일어났다.⁴⁹⁾ 이는 을중의 갑종 승격 문제가 학교 운영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갑종과 을중 간의 학제적 격차가 진학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친 영향은 <표 2>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6) 안홍선, 앞의 책, 46~47쪽; 「農校昇格運動」, 『朝鮮日報』 1928.2.4. <표 1>의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2개교의 갑종 학교는 지역민의 거센 요구에 대한 정치적 산물이다.

47) 「江陵農校 英語 教授」, 『每日申報』 1928.9.10.

48) 「江陵農校에 應募生 三培 昨年보다 減少」, 『東亞日報』 1929.4.1.

49) 「江陵農學校 昇格實現期」, 『釜山日報』 1932.12.3; 「江陵農校 昇格 當局에 認可願提出」, 『每日申報』 1933.1.19; 「四月에 昇格될 江陵農校 志願者 殺到」, 『每日申報』 1933.3.8; 「江陵農業學校 甲種 昇格 遲延」, 『朝鮮日報』 1933.12.25.

〈표 2〉 강원도 농업학교 졸업생 진로 상황(1933~1934)

구분		입학 정원	졸업 자수	관공서 취직자	학교 교원	은행 회사 취직	가정	상급학교 입학자		사망
								공립 학교	사립 학교	
1933	춘농(갑)	55	33(2)	22	2(2)	7	2	0	0	0
	강농(을)	50	44	23	0	0	16	3	2	0
1934	춘농(갑)	57	37	21	5	7	1	0	1	2
	강농(을)	50	28	17	0	0	7	3	1	0

·자료 : 江原道教育會, 『江原道教育要綱』, 1935, 4쪽; 江原道教育會, 『江原道教育要綱』, 1936, 8~9쪽;
『朝鮮總督府官報』 제568호, 1928.11.21; 제887호, 1929.12.16에서 작성함.

·비고1 : 갑은 5년제, 을은 3년제 학교이며, 관호는 일본인 졸업생 수임.

·비고2 : 1934년 강릉농업학교 졸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동맹휴업으로 3학년 퇴학자 11명이 있었기 때문임.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매우 역설적이다. 진학 자격을 갖춘 갑종 춘천농고는 2년간 진학자가 1명인 데 반해, 자격이 없는 을종 강릉농고는 공립 6명, 사립 3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11~14%가 진학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을종의 ‘상급학교’에는 전문학교, 대학 예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뿐 아니라 같은 중등교육 기관의 갑종학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애초 갑종 승격의 핵심 혜택이 바로 이 진학 자격이었다. 1927년 춘천농고가 갑종으로 승격했을 때 언론은 그 5년제 졸업생이 대학 예과에 수험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3년제 을종 졸업자가 전문학교 수험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인 전문학교입학자격 검정은 전국 합격자가 1933년 7명, 1934년 3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 고보 출신이었으므로, 을종 졸업생의 진학은 사실상 5년제 갑종학교의 4학년 편입학뿐이었다.⁵⁰⁾ 강릉농고 6회 졸업생 崔容根이 그 사례이다. 1933년 강릉농고에 입학해 1936년 졸업한 그는,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얻기 위해 갑종 춘천농고 4학년에 편입해 2년을 더 이수한 뒤 1938년 줄

50) 『春川農校昇格 五年制甲種校』, 『毎日申報』 1927.1.5; 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전문학교 입학자격 제도에 관한 시론」, 『教育問題研究』 32(2),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67쪽, 70쪽.

업하고서야 일본 모리오카(盛岡)고등농림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⁵¹⁾ 1930년대 강릉농교에서 춘천농교로는 해마다 약간 명의 편입생이 있었는데, 최용근의 경로는 을중 졸업생이 고등교육에 이르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우회의 전형이었다. 고등교육을 지망하는 학생에게는 을중보다 갑종이 효율적 선택이었으나, 강릉에는 갑종에 입학할 학업 능력이 있어도 타지 유학 외에는 을중 강릉농교밖에 없었다. 학교 입지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한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어긋난 것이다.

취업의 질에서도 위계는 관철되었다. 관공서 취직은 갑·을중 모두 절반을 상회하여, 1933년 춘천농교 66.7%, 강릉농교 52.3%, 1934년 춘천농교 56.8%, 강릉농교 60.7%로 학교 위계와 무관하게 가장 큰 취직처였다. 그러나 교원⁵²⁾과 은행·회사에는 갑종 졸업생만 진출했고 을중 졸업생은 2개년간 전무했다. 미취업으로 분류된 ‘가정’ 항목은 전업 농부보다 취직처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업학교 규정상 농업학교는 전업 농부 양성이 목적이었으나, 실제 졸업생 대부분은 봉급생활자를 지망했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미취업자는 춘천농교가 2년간 3명인 데 반해 강릉농교는 23명에 달해, 당시 을중학교 졸업생이 취업전선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산공립상업학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을중이 되어 현금 격화된 취직 전선에서 다른 갑종 출신의 뒤미에 깔려 취직 전선에 패군 노릇을 할 뿐 아니라 현하 진보된 경제 전선에 있어서도 을중 3년 졸업으로서는 완전한 일꾼 노릇을 하기에 부족하다.⁵⁴⁾

이처럼 취직 전선에서 갑종과 을중의 간극은 컸다. 또한 취직처의 지

51) 春川農業高等學校同窓會, 『春農七十五年の脈絡』, 1984, 73쪽; 江陵農業高等學校同窓會, 『江農六十年史』, 1988, 370쪽. 강릉군 출신으로 강릉농교, 춘천농교, 日本盛岡高等農林學校를 졸업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사, 강릉농업고등학교 교장, 제3, 4대 강릉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

52) 갑종 출신 중 교원 지망자는 평양, 대구사범학교의 강습과나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에 진학해 1년을 수학한 뒤 보통학교 교원으로 입직할 수 있었다.

53) 「農校卒業生으로 農民을 指導케」, 『朝鮮日報』 1927.10.2

54) 「馬山公立商業學校 甲種昇格絶望視」, 『朝鮮日報』 1937.11.28.

위와 급여에서도 격차는 컸다. 1938년 강릉농교 졸업생의 관공서 취직 23명은 군 농회·면사무소 12명, 농림국 4명, 사방사업소 4명, 영림서 3명이었다.⁵⁵⁾ 농회는 군청 부속의 농정 말단 수행기구로 졸업생은 기수, 지도원, 사무원으로, 면사무소에는 기수, 서기, 잠업지도원 같은 농업 기술직으로, 총독부 직속의 농림국, 영림서, 사방사업소에는 기수, 사방수, 고원, 축탁 같은 파견직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공서에 몸담고 있으나 정식 관리가 아닌 면리원이나 공리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데 있었다. 반면 갑종 출신은 도청, 군청 같은 상급 기관에 고원으로 취업해 4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수, 삼림주사 같은 정규직 관임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⁵⁶⁾ 학교 간 위계가 그대로 인력 배치의 위계로 관철된 것이다. 갑종과 을종의 학력 차이가 졸업 후 사회적 지위를 이처럼 갈랐지만, 그 차이를 낳은 근본 원인은 개별 학교의 우열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줄 중등학교가 극히 희소했다는 데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역 엘리트로 선발된 학생조차, 갑종이나 을종이나 라는 입지의 우연에 따라 평생의 지위를 갈랐다. 강릉의 학생은 갑종에 갈 학업 능력을 갖추고도 타지 유학이 아니면 을종 강릉농교밖에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학교 위계에 따른 차별은 곧 지역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강릉농교의 입학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보교 졸업생이 증가하면서 중등학교 지원자가 속출한 데다, 갑종 승격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겹친 결과였다. 승격은 곧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뜻했으므로, 지역사회의 승격 열망은 해가 갈수록 뜨거워졌다. 1935년 8월 신임 도지사 孫永穆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에도 유지집단은 승격을 진정했다. 그러나 손영목은 이를 거부했다.

강릉농업학교 교육설비는 잘 갖추진 농업보습학교에서 벗어날 바 없다.

55) 1938년 강릉농교 8회 졸업생 46명의 취업 현황은 군농회·면사무소 12명, 금융조합 14명, 농림국 4명, 사방사업소 4명, 영림서 3명, 실업 4명, 상급학교 5명이었다(『江陵農校 卒業式』, 『每日申報』 1938.3.9.).

56) 이용기, 「일제강점기 을종 농업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상주공립농잠학교의 사례」, 『역사문화연구』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2, 166쪽.

설비를 확충한 다음에 학년 연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이며 우선 설비 확충에 노력하라.⁵⁷⁾

손영복은 설비의 질적 미비를 승격 불가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그 질적 미비의 원인은 총독부의 학교 배치 정책 자체에 있었다. 갑종-을중-보습의 위계 안에서 강릉농교는 애초부터 갑종 춘천농교를 넘어설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춘천농교가 갑종 승격 후 농잠과-농림과의 양과 체제로 전문화되고 교사 이전과 실습지 확대의 양적 확장을 이룬 반면, 강릉농교에는 승격 요구만 있었을 뿐 성장이 뒤따르지 않았다. 열악한 설비를 이유로 승격을 거부하면서 그 설비를 열악하게 만든 정책은 도외시하는, 앞뒤가 뒤바뀐 논법이었다. 승격 불가의 또 다른 사유로 학생들의 잦은 맹휴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당시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맹휴가 벌어지고 있었던 만큼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⁵⁸⁾

결국 강릉농교의 갑종 승격은 지역의 노력이 아니라 정책 국면의 전환으로 실현되었다. 1930년대 보교 증설과 졸업자 증가로 중등학교 진학 열망이 높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학교 설립 청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시체제가 기술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총독부는 그 대응책으로 1936년 7월 「중등교육통제확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 도에 두세 개 있는 농업학교 중 을종의 갑종 승격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농업학교 위계 구성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강릉농교는 1939년 9월 30일 갑종으로 승격했고, 각지의 을중농교도 순차로 갑종학교가 되었다.⁵⁹⁾ 지역민의 십수 년 승격 노력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총독부가 농업학교의 갑종-을중-보습 위계체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승격은 지역의 열망

57) 「江陵農校 昇格 問題 當分間 實現 難?」, 『朝鮮日報』 1935.9.2.

58) 강릉농교 맹휴 등 학생운동은 이종철, 「日帝時代 江陵地方 抗日運動 研究」, 『嶺東文化』5,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4를 참조할 것.

59) 「商工農水中心의 實業教育을 擴充」, 『朝鮮日報』 1936.7.31. 전술했듯이 강릉농교의 갑종 승격의 주요 요인은 전시체제가 정책적 기술 인력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는 강원도회 의원이자 중추원 참의인 최준집의 정치력이 승격을 앞당긴 공로라고 보도하고 있다(「江陵農業學校 五年制 昇格實現 崔參議 功勞 多大」, 『每日申報』 1939.10.14).

이 관철된 결과가 아니라, 전시체제기 총독부의 필요가 위계를 풀어 준 결과였다. 강릉농교의 갑종 승격 운동은 학력주의가 심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려는 지역사회의 집단적 행위였으나, 그 성패는 끝내 지역이 아니라 식민 권력의 정책 판단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4. 결어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지역의 중등학교가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위로부터 배분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끈질긴 요구와 식민 권력의 억제·회유가 맞부딪친 자리에서 타협의 산물로 세워졌음을, 관립 고보 유지의 좌절에서 을중 농업학교의 설립과 승격에 이르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규명하였다.

2장에서는 관립 고보 유치를 둘러싼 강릉과 춘천의 경쟁과 그 좌절 이후의 분열을 살폈다. 5년제가 된 고보는 개인에게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지역사회에는 외지 학생의 유입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낳는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었다. 강원도 내에 진학할 중등학교가 사실상 부재한 조건에서, 도별 1개교뿐인 고보를 어느 군이 차지하느냐는 지역사회의 사활이 걸린 쟁점이었다. 강릉은 1921년 도평의회에서 건강지, 물가, 교통을 근거로 적지로 결의되고도,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의 결정이 총독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도청 소재지 우선 원리에 밀려 춘천에 유치를 빼앗겼다. 그 좌절은 문중·지주 중심 기성회의 조직적 열세에서 비롯한 것이자, 더 근본적으로는 학무행정의 효율과 사상 통제를 위해 고보를 도청 소재지에 두려 한 총독부의 배치 원리에서 비롯한 구조적 산물이었다. 좌절 이후 강릉은 사립고보 시도와 춘천농교 이전 운동으로 양분되었다. 인문 노선과 실업 노선의 대립 밀바탕에는 인문학교를 선호하는 지역민의 뿌리 깊은 경향이 있었으니, 강릉이 고보 실패 직후 곧바로 사립고보를 재추진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사립학교 설립이 사실상 불

가능한 조건에서 흩어진 운동은 결국 관 주도의 단일 기성회로 수렴되었고, 그 틀은 지역민이 바라던 고보가 아니라 총독부가 의도한 농업학교로 귀결될 통로였다.

3장에서는 관 주도의 타협으로 설립된 을중 강릉농업학교의 설립 과정과 그 구조적 차별을 분석했다. 14만 원의 설립비 가운데 강원도가 부담한 것은 2만 원뿐이었고, 나머지는 향교 재산과, 주민이 기금을 모아 세운 공유 모범장의 매각 대금, 지역민의 기부금으로 채워졌다. 국가가 마땅히 부담할 학교 설립비가 지역에 전가되고, 그 지역 안에서 부담은 다시 강자에서 약자로 전가되었다. 명망을 쫓던 유지들이 납부를 회피하는 사이, 그 부담은 빈궁자에게까지 호별로 부과되어 무산계급에게 지워졌다. 강원도 당국이 지역민의 고보 열망을 ‘산업 장려’라는 명분으로 치환해 실업학교로 유도한 것은, 인문 중등교육을 억제하려는 총독부 정책의 축소판이었다. 어렵게 세운 학교가 을중이었다는 사실은 곧 새로운 차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을중은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얻지 못해 그 졸업생의 진학은 감중학교 편입이 대부분이었고, 취업에서도 교원이나 정규직 관리의 길이 막힌 채 면리원, 공리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었다. 학교 간 위계가 그대로 인력 배치의 위계로 관철된 것이다. 강릉 사회는 10여 년간 감중 승격을 요구했으나, 승격은 지역의 노력이 아니라 전시체제가 총독부의 기술인력 수요가 위계를 풀어 준 1939년에야 실현되었다. 학교의 설립도 승격도 끝내 지역의 열망이 아니라 식민 권력의 필요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강릉의 사례는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중등학교 유치 운동은 식민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도 지역민이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 능동적 실천이었다. 관립 고보에서 사립고보로, 다시 농업학교 이전으로, 끝내 을중 농업학교로 유치 대상이 하향 조정되어 간 과정은 그 길항의 연속이었다. 학교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구와 정책이 반목하고 절충하는 그 길항 속에서 지역민이 얻어 낸 결과였다. 둘째, 그 공공재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유지의 사재와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었다. 총독부는 도별 1개교라는 희소성을 이용

해 군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하고 설립 재원을 조선인에게 전가했다. 셋째, 그 부담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계급적으로 전가되었다. 유산계급은 유치의 명망을 좇으면서 그 비용을 무산계급에게 떠넘겼고, 무산계급은 애초 중등교육의 기회를 접할 능력조차 없으면서 그 설립 부담을 먼저 짊어졌다. 요컨대 식민지 공공재의 수립은 국가 재정의 지역 전가 그리고 유치의 명망과 무산계급의 부담을 맞바꾸는 이중의 전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끝으로 1930년대 후반 강릉공립상업학교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관립 고보에서 을중 농업학교를 거쳐 갑중 상업학교에 이르는 강릉지역 중등학교 설립 양상의 특질을 더 온전히 규명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사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諸學校一覽』 각년도판, 江原道, 『統計圖集』(1923)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時代日報』, 『釜山日報』, 『中外日報』,
『東光』

<단행본>

강릉문화원, 『강릉의 동족 마을』, 2012.
江陵農業高等學校, 『江農六十年史』, 1988.
江原道教育會, 『江原道教育要綱』, 1935.
江原道教育會, 『江原道教育要綱』, 1936.
마쓰모토 다케노리, 윤해동 譯, 『조선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아마노 이쿠오, 박광현·정중현 譯, 『제국대학』, 산치림, 2002.
朝鮮警察協會,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32.
朝鮮總督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최승순, 『江原輿地勝覽』, 율곡학회, 2009.
春川農業高等學校總同窓會, 『春農七十五年の 脈絡』, 1988.

<연구논문>

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전문학교 입학자격 제도에 관한 시론」, 『教育問題研究』
32(2),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67쪽, 70쪽.
金興術, 『江陵의 都市變遷史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16쪽.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1~
33쪽.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35쪽.
이명화, 「朝鮮總督府 學務局의 機構變遷과 機能」,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59~60쪽.
이승렬, 「1930년대 중추원 주임 참의의 지역사회 활동과 식민지배체제-강원도 지
방참의 최준집의 사례: 군국주의에 포획된 근대적 공공성」, 『역사문제연
구』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이용기, 「일제강점기 을중 농업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상주공립농잠학교의 사
례」, 『역사문화연구』8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2, 166쪽.
이종철, 「日帝時代 江陵地方 抗日運動 研究」, 『嶺東文化』5, 관동대학교 영동문

화연구소, 1994.

장경호, 「1905~1910년 전후 강원 영동지역 사립학교 설립 현황과 졸업생들의 행보」, 『한국교육사학』43(1), 한국교육사학회, 2021.

_____, 「일제강점기 삼척공립직업학교의 운영과 졸업생의 활동」, 『江原史學』41, 강원사학회, 2023.

정성호, 「강원사회의 지역갈등: 영동·영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 1997, 81~82쪽.

제은숙, 『日帝下 朝鮮人の 中等學校 振興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63쪽, 69쪽.

<인터넷 자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 (검색일:2026.8.15.)

Abstract

The Movement to Attract Secondary Schools in the Gangneung Region and the Development of Colonial Educational Distribu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Heun

(Institute of ChunCheo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establishment of secondary schools in the Gangneung reg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dynamic confrontation and compromise between colonial suppression policies and the autonomous agency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early 1920s, Gangneung actively sought to attract a government-established Higher Common School (Gobo). However, this attempt was thwarted by the Government-General's "one Gobo per province" policy and administrative favoritism toward the provincial capital, Chuncheon. Consequently, the local movement fractured into campaigns for a private Gobo and the relocation of Chuncheon Agricultural School, eventually converging unde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year, Eul-jong (Class B) Gangneung Agricultural School in 1928. Nevertheless, the Eul-jong classification imposed structural discriminations in higher education access and employment. Despite persistent local petitions for elevation, its promotion to a five-year Gap-jong (Class A) status was only realized in 1939 due to wartime human resource mobilization. Crucially, the financial foundation was derived not from state funding, but from local community assets—such as Hyanggyo estates, the liquidation of communal model farms, and head-tax quotas imposed on the working class. Ultimately, Gangneung's secondary education movement illustrates a

colonial compromise founded on a “double shifting of burdens,” wherein the state shifted financial responsibilities onto the locality, and the local landed elites subsequently shifted them onto the impoverished class.

Keywords: Gangneung, Secondary School Attraction Movement, Higher Common School, Eul-jong Agricultural School, Double Shifting of Burdens, Colonial Educational Distribution

김 현

소 속: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전자우편: honey66@cccc.or.kr

논문투고일 2026. 8. 17. / 심사완료일 2026. 9. 5. / 게재결정일 2026. 9. 15.